

‘무늬만 주차타워’ 광주 전역에 수두룩

준공 검사만 받고 사용 안해 주차난·교통혼잡...시민들 불편만 초래 4개 구 50곳 둘러보니 5곳만 가동...입구 막고 설비 자체도 없이 방치 자치구 과태료도 부과 안해...건물주 꼼수 운영 막도록 강력 단속해야

광주시 첨단 2지구 일대 주차타워가 사실상 서류상으론 마련된 주차장이라는 보도(광주일보 3월 23일 6면)와 관련, 첨단 2지구 뿐 아니라 광주 도심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피용’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주들이 비싼 땅을 확보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대신,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건물 준공 검사만 받은 뒤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류상으론 존재하는 면피용 주차장의 꼼수 운영을 막고 관할 지자체가 강력한 단속을 벌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광주시 5개 구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서구 180개, 광산구 133개, 북구 120개, 남구 73개, 동구 20개 등 총 526개로 주차 가능 면수는 1만 9085쪽에 달한다.

차량 2만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 관리인을 뒀어놓는데다, 사고 시 안전 관리 책임 부담 등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곳은 손으로 꼽을 지경이다. 건축주들이 비용 부담을 들어 주차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면서 매일 2만대 가까운 차량이 건물 밖 도로변에서 주차 전쟁을 치르는 셈이다.

첨단 2지구 뿐 아니라 광주지역 4개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50여곳의 운영 상태를 확인한 결과, 가동되고 있는 곳은 광산구 쌍9암동 신축 건물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 등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도록 입구를 막아놓는가 하면, 설비 자체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주차난이 극심한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내 A건물은 기계식 주차장 입구에 적치물을 쌓아 이용하지 못하게 했고 인근의 B 건물도 차량이 드나들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

주차장 옆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 사용하지 않는다. 주변에 주차하라”고 답했다. 또 다른 건물의 관계자 역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라고 말했다. 남구와 광산구, 동구 등 다른 주차장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건축주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차량 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용은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대지는 56㎡(17평)가 필요하다. 차량 14대를 지상에 주차하려면 175㎡(53평)이 필요한 것과 견줘 3분의 1 수준이다. 광주 주요 상권 3.3㎡당 매매가격이 500만 원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축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별도 관리자를 두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감수해야 하는 책임도 부담돼 서류로만 존재하는 면피용 주차장을 만들어 방치해놓는다는 것이다. 비교적 적은 돈으

로 건물 짓고도 발생하는 주차난은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구청도 건물주들의 이기적 행태를 두고 있다.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광주시 5개 구에서 무늬만 주차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은 서구(10건)가 유일했다. 서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기계식 주차장 2곳도 이날 찾아가보니 여전히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자치구의 ‘건물주 바꾸기’ 행태는 광주시 특별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1년 기계식 주차장 관리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 서구는 무려 13년 3개월 동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에서는 23곳이 정기검사를 미실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과태

료를 부과 하지 않으면서 바꾸기 의욕도 제기된다. 동구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7개 건축주에 과태료나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았고 남구(15곳), 북구(12곳), 광산구(4곳)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묵인했다.

이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 꼼수 운영을 막고 자치구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북구 갑)은 “전국적으로 3만8115개소(77만 1,713면)의 기계식주차장 중 상당수가 방치되어 도심속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위한 편법적 설치와 고중량 차량의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법체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높은 땅값으로 인해 주차 대지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과 자동차 산업 변화의 추세에 맞게 기계식주차장과 같은 파생산업도 유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국연합학력평가 ‘신중하게

24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군수 ‘양복 뇌물수수 혐의’ 경찰, 합평군청 압수수색

경찰이 이상의 합평군수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군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여동안 합평군청 비서실 압수수색에 나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하고도, 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수사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치러진 합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광주지역 한 고급 양복점에서 구입한 10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비용을 지역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다섯 차례 맞춤 양복을 제작했으나 양복점에서 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아 결제가 늦어졌다”면서 “개인적인 불찰은 있지만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합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공무집행 방해’ 기대서 복구의원 벌금 1500만원 선고...직위 유지

광주 복구의원 기대서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대서 광주 복구의원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복구청이 발주한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 2곳이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전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의 좋지 않았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내일까지 최대 70mm 비

26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7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안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5일 오후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비는 26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지역에 30~70mm 비가 내리겠으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에는 8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사시 영광 한빛원전 컨트롤타워가 전북에?

광역방재센터 입지 부안으로 결정 장제일 전남도의원, 재선정 촉구

영광 한빛원전 광역방재센터 입지가 전북 부안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장제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 1)은 24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

빛원전 광역방재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광역방재센터는 방사선 유출 등 원전사고로 기존 영광 군서 방재센터 기능이 상실될 경우 신속히 이동해 사고 수습과 대응을 총괄하는 지휘본부다.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제염실, 상황실, 회의실 등을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부지선정 위탁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영광 한빛원전으로부터 30~35km 이내 부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다.

전남도에서는 합평 해보면을 전북도에서는 부안군 진서면과 줄포면, 정읍 등 총 3곳을 후보지로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북 부안군 줄포면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

다.

장제일 의원은 “우리 도와 영광군은 원전 가동 이후 온·배수 피해 등 각종 사건·사고에 시달렸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정부를 믿고 따른 결과가 이것이나”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신안동 상업부지, 땅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최고 투자처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다
매매 - 44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3평, 사무실 전용, 전망좋은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

대인동 오피스텔부지, 땅
156평, 9층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